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

2022. 2. 10.



행 정 안 전 부

요 약

1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 개요

- (기본방향) **데이터 기반 정부혁신**(Innovation by Data) 정착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강국**』 도약 선도
- 분야별 추진방안

	지금까지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단위과제 분석 ▶ 단편적 업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국정과제 분석 ▶ 전반적 일하는 방식 개선
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주도 양적 개방 ▶ 분야별 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업의 질적 개방 ▶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데이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경진대회, 청년인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기업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 '21년 4월 전략위에 보고된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에서 나아가 데이터기반행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 제시

2 핵심과제별 추진계획(안)

< 추진목표 1 :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 전략적·선도적 국정과제 분석·지원 강화
 -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에 대한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집행·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 발굴·수행
 - ※ (예시) 장기적 방역 대책 수립 위한 지역별 코로나 회복지수 모형화, 지역 인구감소에의 민첩한 대응 위한 분기별 인구감소 위험도 예측 및 시각화 등
 -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 추진
 - ※ (예시) 해수면 상승과 같은 각종 재해에 대한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선제 대응, 발전소의 불완전연소 상황을 예측·관리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 코로나19 회복 취약계층 탐색 및 특성 분석, 독감 등 감염병 유행 예측모델 개발 등 민관협업 데이터 분석과제 추진
- 데이터 기반의 조직·예산·인사 등 일하는 방식 혁신
 -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공통업무(조직·예산·인사 등)를 지원·개선하여 제한된 행정자원의 최적 배분 유도
 - ※ (예시) 예산운영 : 데이터 기반의 사업예산 수요예측 및 예산 신청
- 메타버스 등 활용, 데이터 역량강화 지원
 - 메타버스 기반으로 조직 내 역할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기관별 역량수준 비교진단을 위한 「데이터 활용역량지수」 개발

< 추진목표 2 :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 >

- 데이터 수집부터 대국민 서비스까지 민관협업 확대
 - 정부서비스 구현 시 기획부터 데이터 수집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대국민 창구도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 활용
 - ※ 시민개발자 및 IT서비스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기반 협력체계 구성·활용
- 민간의 완성형 활용을 위한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추진
 - 국민 수요에 맞춘 「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으로 완결성 있는 민간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개방 실효성 제고
-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문서 등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를 기계 판독·분석 가능한 형태로 민간 개방
 - 직접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진위확인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확대

< 추진목표 3 :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지원 >

- 맞춤형 지원으로 유니콘기업 발굴·성장 촉진
 - 데이터 활용역량 및 공공데이터 인식수준별로 대상기업을 모집·선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데이터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추진 (지역혁신국 협업)
 -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 지방·안전 등 부내 주요 데이터 활용 강화
 - 주민·주소·지역경제·재난안전 데이터 등의 신규·확대개방을 지원하고, 지방·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제 적극발굴

< 추진목표 4 :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및 이용기반 개선 >

-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
 - 기존의 데이터 보유기관별 자율 발굴·등록 방식에서 벗어나 행안부 주도로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를 적극 발굴·등록 추진
- 다차원적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 데이터 완성 후 조정이 아닌, 데이터 생성·구축 단계부터 품질관리 개시
 -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강화

목 차

I. 그간의 성과와 진단	73
II. 추진목표 및 핵심과제	74
III. 과제별 추진계획(안)	75
1.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75
2.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	77
3.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지원 ..	79
4.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및 이용기반 개선	81
IV. 향후 추진일정	82

I. 그간의 성과와 진단

-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20.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1.3.) 등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법·제도 마련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민·관 전문가 30명)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규정 등
- 빅데이터 활용과제 발굴·분석*(18년~21년, 39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관리시스템 구축(~22.3.)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등 기반 확충
 -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행태 영향분석, 112신고 기반 범죄위험도 분석, 신규아파트 돌봄수요 예측 등

⇒ 구체적·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별 단위과제 분석→전략적 국정 과제 분석』, 『단편적 업무 개선→전반적 일하는 방식 개선』에 역점

- (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전수조사(780개 기관, 42.4만개)를 통해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18년) 및 개방목표 달성(18년~21년, 14.2만개)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15년~21년, 147종) 등으로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15년, 17년, 19년), OGP 열린정부어워드 본상 수상(21.12.)
 - * 자율주행, 헬스케어, 생활환경, 재난안전 등 신산업·사회현안 관련 공공데이터

⇒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 주도 양적 개방→민관협업의 질적 개방』, 『분야별 개방→서비스별 패키지 개방』으로 방향 전환

-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13년~, 175개 기관 11,394개팀 참여), 청년인턴(20년~, 13,945명 참여), 데이터기업 지원* 등 민간활용 촉진
 - *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등 14개 기관 13개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 협업 방식으로 간접 지원

⇒ 유니콘기업 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방안전 등 부내 주요 데이터 활용』 강화

II. 추진목표 및 핵심과제

기본
방향

**데이터 기반 정부혁신(Innovation by Data) 정착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강국』 도약 선도**

추진목표

핵심과제

[데이터기반행정]

1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① 전략적 · 선도적 국정과제 분석 · 지원 강화
- ② 데이터 기반의 조직 · 예산 · 인사 등 일하는 방식 혁신
- ③ 메타버스 등 활용, 데이터 역량강화 지원

[데이터 개방]

2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

- ① 데이터 수집부터 대국민 서비스까지 민관협업 확대
- ② 민간의 윈윈형 활용을 위한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추진
- ③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데이터 활용]

3 기업성장 · 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지원

- ① 맞춤형 지원으로 유니콘기업 발굴 · 성장 촉진
- ② 주민참여+데이터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추진
- ③ 지방 · 안전 등 부내 주요 데이터 활용 강화

[공통기반]

4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및 이용기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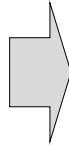
- ①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
- ② 다차원적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Ⅲ. 과제별 추진계획(안)

추진목표 1 :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지금까지 》

- 기관별 단위과제 분석·지원
- 단편적인 업무개선에 활용
- 온·오프라인 기반 역량강화 지원



《 앞으로는 》

- 전략적 국정과제 분석·해결 지원
- 조직·예산·인사 등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 메타버스 등 활용 역량강화 지원

1] 전략적 · 선도적 국정과제 분석 · 지원 강화

○ 국가 차원 이슈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분석과제 추진

-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에 대한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집행·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 추진

《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방안 도출 지원 과제 예시 》

국가적 현안 예시	데이터 분석 방안
장기적 방역 대책 수립	지역별 코로나 회복지수 모형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효과성 증대	데이터 기반의 관광패키지 추천
지역 인구감소에의 민첩한 대응	분기별 인구감소 위험도 예측 및 시각화

-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수행

※ (예시) 해수면 상승과 같은 각종 재해에 대한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선제 대응, 발전소의 불완전연소 상황을 예측·관리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 주요이슈 관련 분석모델 발굴 및 주도적 분석 수행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기존 분석모델을 선별하여 분석참조모델로 정립하고 활용률 제고

※ (예시) 위기 소상공인 사전 예측, 일자리 고용환경 분석, 지역상권변화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분석, 지역사랑상품권 분석 등

- 사회적 이슈 현안 실시간 탐지모형 구현 등 주도적 과제발굴 및 분석 실시

- 민관협업으로 민간데이터 활용 촉진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융합 및 기술협력 등 공동분석과제 발굴 수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포럼 등) 구축
 - 코로나19 회복 취약계층 탐색 및 특성 분석, 독감 등 감염병 유행 예측모델 개발 등 민관협업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수행

② 데이터 기반의 조직·예산·인사 등 일하는 방식 혁신

-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공통업무(조직·예산·인사 등)를 지원·개선하는 혁신적인 과제발굴 및 분석 추진
 - 여러 단계에 걸친 취합이나 단순 수작업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데이터 분석 모형을 활용해 개선
 -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인력 등 제한된 행정자원이 최적 배분되도록 유도

《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 예시 》

업무분야	분석과제 예시
조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조직검토 이력문서 자동분류
예산운영	데이터 기반의 사업예산 수요예측 및 예산 신청
인사관리	유연근무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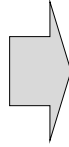
③ 메타버스 등 활용, 데이터 역량강화 지원

-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강화
 - 메타버스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몰입도 제고 및 조직 내 역할,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
 - ※ (예시) 아바타 활용 분석실습, 데이터로 달라진 혁신사례체험(가상공간), 협업분석 놀이터 등
- 공공기관 데이터 역량 진단을 통한 데이터 역량 강화 촉진
 - 각 행정·공공기관의 역량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기관 간 상호 비교 가능한 「데이터 활용역량지수(가칭)*」 개발 및 시범적용
 - * (예시) 데이터 분석과제 기획, 데이터 수집·분석, 정책에 활용 등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측정

추진목표 2 :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

《 지금까지 》

- 공공 주도 방식의 양적 개방
- 분야별·영역별 데이터 개방
- 정형데이터 중심의 획일적 제공



《 앞으로는 》

- 민·관협업 방식의 질적 개방
- 완결성 있는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 비정형데이터의 유형별 체계적 개방

1 데이터 수집부터 대국민 서비스까지 민관협업 확대

- 정부서비스 구현 시 기획부터 데이터 수집에 이르기까지 민간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대국민 창구도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 활용
 - Civic Hacker(‘코드포코리아’ 등 시민개발자) 및 IT서비스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기반 협력 프로젝트 체계 구성·활용
 - 특히, 긴급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SOS*」체계 적극 운영으로 이슈 관련 데이터의 신속한 민간개방·활용지원 추진
- * 긴급한 사회현안 발생시 민첩대응을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비

⇒ ① 정부구축보다 개발기간 대폭 감축 ② 국민의 서비스 접근 편리
③ 계약관계가 아닌 자발적 협력관계로 민간의 능동적 참여 배가

※ (마스크 판매 데이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데이터)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민간에 개방,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탑재하여 제공
(요소수 재고 데이터)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민간협업 기반으로 추진

《 (예시) 요소수 데이터 제공 민관협력 체계: 기존 정부서비스 구축절차와 비교 》



② 민간의 완성형 활용을 위한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추진

- 국민 수요에 맞춘 「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할 주요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패키지) 식별, 서비스에 필요한 형태로 생성·정제·가공하여 개방
- ⇒ **완결성 있는 민간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개방 실효성 제고**

《 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 창업지원 서비스 패키지 예시 》

분류	산업·고용
활용서비스	개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단계(절차)	① 아이템 발굴 및 시장조사 ⇨ ② 회사 설립 ⇨ ③ 회사 운영
필요 데이터 패키지	① (아이템 발굴 및 시장조사) 창업자정보, 가격정보, 소비현황, 공정거래정보 등 ② (회사 설립) 창업금융지원정보, 산업단지정보, 상가정보, 창업공간정보 등 ③ (회사 운영) 중소기업지원 정보, 구직/인턴 정보, 거래처 사업자 정보 등

③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의 유형별 체계적 관리·개방 추진
 -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문서 등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를 기계 판독·분석 가능한 형태로 민간 개방

《 공공생산 비정형 문서자료의 민간 개방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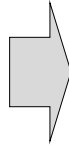
구 분	개방 지원방안
위원회 결정문 (권익위·공정위·개인정보위)	-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서, 공정위 시정명령 의결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등 3개 기관 결정문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통합 개방 지원('22.3월~)
전자관보 (행안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전자관보 데이터 개방 로드맵('22~'23) 및 개방전략 수립 지원 - 전자관보 PDF서비스의 오픈API 설계·개발 제공(일자별, 키워드별, 편집구분별, 기관별, 주제별 조건 등)
업무상 질병판정서,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의결한 판정서 및 산재보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 등의 관련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정제·개방('22~)

- 직접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진위확인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사업자정보 실시간 확인서비스('21.6월~), 기차 승차권 구매정보 진위확인('22.3월~) 등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추진목표 3 : 기업성장 · 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지원

《 지금까지 》

- 기업역량과 무관한 획일적 간접 지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의 연계성 미흡
- 지방안전 등 부내 주요 데이터 활용 부족



《 앞으로는 》

- 기업 상황별 맞춤형 성장 지원
- 주민참여+데이터기반 지역문제해결 기여
- 생활체감도 높은 부내 데이터 적극 활용

1] 맞춤형 지원으로 유니콘기업 발굴 · 성장 촉진

- 기업 상황별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강화」 전략 수립·추진
 - 기업의 창업단계, 관심분야, 역량 등에 따라 지원전략 차별화·다각화
 - 특히 데이터 활용역량 및 공공데이터 인식수준별로 대상기업을 모집·선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역량 미흡 기업: 교육 및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기업 멘토링 등 역량지원 강화
 공공데이터를 이미 활용 중인 기업: 전문컨설팅 제공, 정부사업 정보제공 및 참여지원, 기업·서비스 홍보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

《 기업별 역량 및 활용인식 수준에 따른 지원방안 》

데이터 활용 역량	역 량 O	③ 일반 데이터 활용기업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④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비즈니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역 량 X	① 데이터 미활용 기업 사업에 공공데이터 결합 시 잠재력 등에 대한 인식개선	→	② 예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데이터 활용교육 등을 통해 비즈니스에 공공데이터 접목 지원
		↑		↑
		인식 X		인식 O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인식

- 공공데이터 활용 유니콘기업 발굴·성장 촉진
 - 공모전 참가·수상팀 대상 컨설팅, 투자유치 및 홍보 지원 등 성공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확대
 - 초기 스타트업, 도약기업 등의 건의사항 청취 및 수요 반영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및 네트워킹 강화

② 주민참여+데이터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추진

- 주민참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혁신국 협업)
 - *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픈데이터포럼·공공데이터 전문가와 협업해 생활현장 속의 문제해결을 지원
 -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22년~)
 - ※ (소통협력공간) 연간 160여건 생활실험 진행, (지역문제해결플랫폼) '21년 159건 의제 실행
- 지역별 공공데이터 활용 연계·협업 강화
 - 지역거점 지원센터(오픈스퀘어D) 기반으로 지역기업의 니즈 파악 및 지역시민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교육 시행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공모전 개최 등 추진

③ 지방·안전 등 부내 주요 데이터 활용 강화

- 민생과 맞닿아 있고 기업에도 활용가치 높은 지방행·재정 및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의 고품질 가공·개방 및 정부 내 분석활용 활성화
 - (지방데이터) 주민·주소·지역경제 데이터 등의 신규·확대개방을 지원하고, 지방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제* 적극발굴
 - * (예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수요예측으로 케어서비스 적정규모 산정 등
 - (재난안전데이터) 데이터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간개방·분석활용 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책적 협업 및 사업을 통한 지원 등 추진
 - *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 중 ('21년 ISP, '22~'24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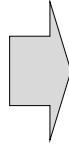
《 부내 주요 데이터 활용 강화 지원방안 예시 》

주요 데이터	활용 강화 지원방안
주민등록 통계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전략마련 컨설팅 및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 - 수요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 (수요기업 자문회의 旣개최(12월2주))
주소 데이터	- 사물주소(버스정류장·인명구조함·드론배달점 등), 상세주소(지하상가 상점별 주소) 등 신규 주소데이터에 대한 구축·개방·활용지원 협업 - 다양한 데이터에 주소정보 연계로 공간기반 분석활용 활성화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사용처 등의 관련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정제·개방
재난안전 데이터	- 사물인터넷 기반 수집데이터(강우·적설·기온정보, 급경사지 센서 등), 재난상황이력 등의 데이터에 대한 구축·개방·활용지원 협업

추진목표 4 :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및 이용기반 개선

《 지금까지 》

- 공동활용 데이터 확대 등 기반 확충
- 품질관리, 표준화 등 제도화 추진



《 앞으로는 》

-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
- 다차원적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1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

○ 공동활용 대상 Data Pool 확대

- (행안부 직접 발굴·등록 강화) 기존 데이터 보유기관의 자율 발굴·등록 방식에서 벗어나 행안부에서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 발굴·등록 추진*(데이터기반행정법 제8조제3항)

*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지원 사업(22. 34억) : 데이터 발굴·결합·가공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형태로 제공 예정

- (시스템 연계로 데이터 수집제고)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각부처·공공기관 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용한 데이터 발굴·등록
- (기관 자율등록 독려) 데이터 보유기관의 자체 발굴·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관사용자 교육 실시(연2회), 실태점검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데이터 활용편의성 제고

- (메타데이터시스템 연계) 메타데이터시스템*과 '공동활용 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기관의 타기관 보유 데이터 검색·활용 편의성 제고

* 각 기관 보유 DB데이터에 대한 데이터항목 및 소재파악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우수사례 등록) '공동활용 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에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등록하여 이용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22.3월)

* (내용)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절차, 분석결과, 활용사례 등을 기관 간 공유

② 다차원적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 사후적 품질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로 중점 변경
 - 데이터 완성 후 조정이 아닌, 데이터 생성·구축 단계부터 품질관리 개시
 - 구축계획에 데이터 표준·구조·값·관리 등 검증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완료 시 검사·감리에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절차 제도화
 - 예방적 품질관리 결과를 분석하여 데이터 오류율 및 연계 정합성 등 이용자가 체감하는 데이터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단체계 개선
-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강화
 - 데이터 간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법정부 공통표준용어'로 제정하여 운영
 - ※ (공통표준용어) '20년 535개 → '21년 1,055개 → '22년 1,500개 이상(목표)
 - 유사 데이터를 서로다른 형태로 제공하지 않도록 제공표준 추가 제정 확대
 -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20년 122개 → '21년 137개 → '22년 154개(목표)
- 국가기준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품질관리
 - * 다수의 행정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정보 중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 (주민, 주소, 건축물, 토지 등)
 - 전자정부법 개정(21.12.9.)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신규 지정 및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본격 시행
 - ※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고시 및 '국가기준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22.1월)
 - 국가기준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 * (연계서비스 제공) '20년 20개 시스템 → '21년 89개 시스템 → '22년 140개 시스템(목표)

IV. 향후 추진일정

- 각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22.2월)
 - 과제별 관계부처·부서 협의, 전문가 검토, 위원회 논의 등 추진
- 데이터 기반 혁신 정책과제 본격 추진 ('22년~)
 - 데이터 개방·분석·공동활용 사업 및 기관 간·민관 협업 추진 등